

전통시장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 도, 안전망 조성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9억원 확보 설치... 12개 시장·1207개 점포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화재감지, 소방서·점포주에게 즉시 전송 화재진압

전북도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조성 사업에 나선다.

전북도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위해 국비 7억원을 포함 총 9억원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과 군

산 공설시장 등 도내 12개 시장 1,207개 점포에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감지센서가 24시간 열·연기·빛을 감지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즉시 전

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화재진압 골든타임(5분)을 확보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시장 내 공용구간보다 개별점포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개별점포의 화재

감지시설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상인화와 협의를 통해 현재 28% 수준인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화재입력시설 설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을 전국 유일하게 지원하며 도민의 생활기반인 전통시장 안전확보에 구심점을 갖춰나가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점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80%를 도와 시군이 반반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1점포 1소화기 갖기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소화기 작동법과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등 화재예방활동에 대해서도 주력하고 있다.

유근주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 전통시장 화재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소중한 생명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잃을 수 있다"며 "화재입력시설 설치와 더불어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 상인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중국 창사 국제식품박람회 전북 홍보관 운영

전북도, 중국 내륙시장 본격 공략 오늘부터 5개 부스·8개 업체 박람회 참가

전북도와 (재)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중국 내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중국 후난성 창사 국제회전중심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식품박람회'에 총 8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북홍보관에는 중국 내륙시장 직접 공략을 위해 바다향(조미김)과 메트루비엔에프(음료), 그로스다림에프앤비(고구마분말가공품), 마이코(누룽

지 현미스낵), 아리울수산 및 푸드코치(수산물가공식품), 모닝팜(블루베리가공식품) 그리고 강등오케익(제빵) 등 8개 업체(25여 품목)가 참가한다.

중국 내륙시장의 대표 소비도시인 창사에서 개최되는 이번박람회는 중국 상무부와 후난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는 식품박람회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급성장해 가고 있는 중국 내 유력박람회 중 하나다.

전북도와 생진원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중국 내륙시장의 신규 바이어 발굴은 물론 바이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우리 도 제품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호일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중국 창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중국 후난성 상무청과의 상호 박람회 참가 및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데, 전북 농식품 수출의 교두보를 내륙지역에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서로 꾸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체전 친절서비스 캠페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친절서비스 캠페인 및 결의대회가 1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담당공무원들과 유관기관,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들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친절서비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광역브랜드 예담채, 홍콩 아시아월드 참가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전북 13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전북 대표 원예농산물 브랜드 예담채, 농산물을 가지고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Asia World Expo)전시장에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12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43개국 약 820개 업체와 1만3천명의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았다.

또한, 세계 농산물 박람회 중 손꼽히는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농산물을 한자리에 전시하며 수출 상담도 바로 할 수 있어 우수한 전북 농산물을 알리고 수출하는 계기가 됐다.

전시상품은 무주(포도사과), 정음(씨없는 수박), 전주(배), 완주(메론), 안파(감시조), 김제(고구마 양갱), 남원(파프리카), 순창(아로니아 분말) 등 전시, 세계 각국의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하고 직접 수출과 연관하는 등 예담채 농산물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박람회 기간 70여건 상담 그 중 10건 정도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해외시장을 지속적 공략하여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 3천백만불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병무청, 내년 입영대상 19일까지 '카투사' 모집

전북병무청은 2019년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주한미군 근무 한국군)를 오는 13~19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1980~2000년생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치러진 어학성적이 있어야 한다.

토익(TOEIC)은 780점, 토플(TOEFL)은 아이비티(IBT) 88점 이상, 피비티(PBT) 561점 이상이어야 한다.

토플(TOEPS)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점수로 지원 시에는 38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응시자는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680점 이상이면 된다.

합격자는 어학 접수별 상·중·하 3개 그룹으로 구분 오는 11월 1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된다.

추첨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에 게재된다.

/뉴스시

부안군 수산행정 뒷북행정 탓에 위도 앞바다 빼앗길판

부안군과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치열하게 법정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 뒷북행정과 느장대처로 부안 위도 앞바다를 통째로 빼앗길 판에 있어 군민들의 분노가 불꽃을 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 절반이 해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안군 수산행정과 고창군이 지난 2016년 8월 29일 관할수역 관할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파악은 물론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위도 앞바다를 빼앗길 판에 놓였다고 군민들은 안일한 부안군 수산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관할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해역은 부안 위도와 고창 구시포항 사이에 위치한 수역으로 지난 2014년 말 한국해양정책이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실증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고창군은 발 빠르게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창군 측은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에 관할쟁의심판을 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육지의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km)까지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이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정당에서 현황 설명을 통해 "관할 해역을 공해 상과 격리하는 방식은 국가간 해상경계를 확정할 때도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적으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현재가 합리적으로 해상경계를 확정해주시 바랍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발행된 국가기본도에 있는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조차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는 고창군이 재빠르게도 관할권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때까지도 아무런 대응 없이 있다가 고창군에 빼앗길 판에 놓이니 부러부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비 등으로 아까운 군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어 그 원망은 부안군으로 집중되고 있다.

헌법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헌법정당장은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적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름이 있는 해역의 지리적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 두 지자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